

“코인과세, 기준·인프라 부족… 투자자 이탈 등 경쟁력 하락”

내년 250만원 초과 소득 과세
정부 ‘소득 있는곳에 과세’ 원칙
업계·與野 ‘시기상조’ 한목소리
“취득가액 산정 할 인프라 없어
추가 유예나 폐지 검토”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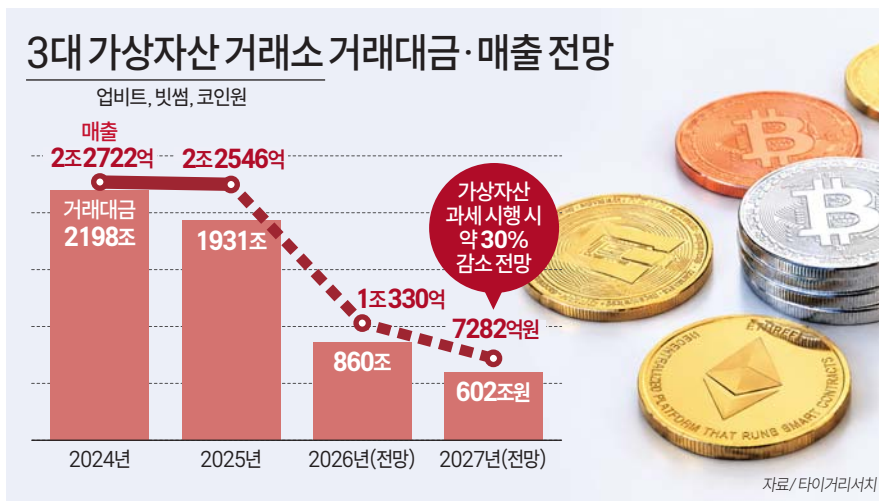
내년 초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두고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를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시기상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소득에 대한 명확한 과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관련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세를 강행하면 국내 가상자산 업계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27일 정치권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과세당국은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의 양도 및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한다. 관련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며, 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부대비용)를 공제해 250만원을 초과한 소득에 대해 22%(20%+지방세 2%)를 과세한다.

가상자산 관련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하고 국내 거래량도 늘어나는 가운데 최초로 논의됐다. 그러나 투자자 보호 및 과세를 위한 제도 및 법령의 부재, 과세 인프라의 미흡 등을 이유로 세 차례 유예돼 당초 2022년 시행을 목표로 했던 법안은 2027년 초까지 시행이 미뤄졌다.

◆ 정부 “내년부터 시행”

정부는 이미 세 차례에 걸쳐 법령 시행을 미뤄온 만큼 가상자산 관련 과세를 더



는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소득이 있는 곳에는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따라 가상자산 소득에도 과세가 필요하며, 현재 구축된 인프라로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1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미 시간을 상당히 미뤄 놓은 상황이다. 지금 (가상자산 과세를) 출발해도 충격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며 “통계에 따르면 전체 투자자 85%의 가상자산 보유 규모는 500만원이 되지 않는다.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인 만큼 대부분의 투자자들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형일 부총리는 또한 “(과세 인프라와 관련해) 국내거래소 이용자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거래명세서를 통해 세원포착에 어려움이 없고, 또한 해외거래소 이용자의 경우 해외금융계좌신고, 정보교환체계(CARF) 등을 통해 과세자료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 업계 “시스템부터 마련해야”

가상자산업계와투자자들의 시각은 다르다. 해외 거래소와 개인 지갑을 오간 가상자산의 취득가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인프라가 없고, 과거와 달리 대어·스테이킹·에어드랍 등으로 다변화한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해 명확한 기준도 없이 과세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한다.

정부는 최초 취득가액 및 부대비용, 그리고 매도가격을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기준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해외 거래소나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옮긴 가상자산은 언제, 얼마에 취득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여러 거래소와 지갑을 거쳤다면 취득가격 산정 과정은 더 복잡해지며, 최초 취득가를 산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빠르게 늘어난다.

관련 인프라의 부재는 국내의 거래소의 형평성 문제로도 이어진다. 국내 사업자는 당국의 자료 제출이나 조사 요구에 대응해야 하지만, 해외 거래소에는 당국의 영향력이 미치지 어렵다. 국내 거래소에만 가상자산 관련 과세 부담이 집중되면

투자자들이 조세 부담을 피해 해외로 이탈하는 유인이 커진다.

김재진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회(DAXA) 상임부회장은 지난 21일 가상자산 과세제도 관련 간담회에서 “가상자산 업권에서는 장기적으로 과세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면서 “가상자산 관련 징수 체계나 과세 기준 등 충분한 체계가 마련돼야만 국민들로부터 공감받을 수 있는 과세 제도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행안대로 과세가 시행되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분석도 뒤 따른다.

가상자산 전문 리서치 기업 타이거리서치는 최근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인식조사 분석 리포트’에서 현행 제도로 과세가 시행되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 거래량 상위 3개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올해 860조원에서 내년도 602조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국내 거래소의 거래대금이 1년 만에 약 258조원(30%)이 줄어드는 셈이다.

◆與·野, “과세는 시기상조” 한목소리
가상자산 소득 과세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야당은 법안 시행이 시기상조인 만큼 추가 유예나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21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 주재로 5대 원내거래소(두나무·빗썸·코인원·디지털엑스·고팍스) 및 DAXA가 참석하는 ‘디지털자산 과세제도 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일을 세 차례 연기했지만, 아

직까지도 실질적으로 준비된 게 없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라며 “아직 기본법 개념도 마련되지 않았고, 용어에 대한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는데 과세부터 시행하는 것은 국민공감대를 형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여당 내에서도 과세 시행에 앞서 충분한 인프라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달 초 문진석 민주당 의원실은 DAXA 및 한국조세법학회와 ‘가상자산 과세 체계점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과세 근거 법령을 점검하고, 법적 정합성을 논의했다.

이날 주제발표를 진행한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가상자산 소득과 관련한 법률은 2020년에 마련됐지만, 시행 시기가 늦어지는 동안 가상자산 거래 유형은 다양해졌다”라며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둔 관련 법은 일부 진전이 있었으나 여전히 거래유형별 소득 구분이나 과세 시점, 금류세 폐지에 따른 투자자산 간의 형평성 등이 문제로 남아 있다”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최초 발의한 민병덕 민주당 의원이 최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위한 기반이 준비되지 않았다. 해외 거래자료가 확보되기 전에 과세가 시행되며, 주요국과 달리 손실의 이월공제도 허용하지 않는다”라며 “예상 세수 효과와 비용도 공개되지 않은 만큼, 해외 거래자료가 실제로 확보되는 시점에 과세를 시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metro

원전·재생에너지·LNG 등 역할 재조정 ‘AI 전력 대응’

m-커버스토리

2차 전기본 앞두고 전원재편 나서
정부, 3개월간 원전 역할 공론화

탄소중립과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전원 재편 논의가 범국가적 화두가 되고 있다. 석탄 등 화석연료 비중을 낮추는 동시에 재생에너지의 변동성을 보완하고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도 대응해야 해서다. 정부가 수립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원전·재생에너지·액화천연가스(LNG) 등 전원별 역할과 이를 뒷받침할 저장장치·전력망 구축 방안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 서로 다른 전원 특성…안정성·탄소 사이 균형

전원별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 감축 측면에서 장단점이 엇갈린다. 국내 원전 26기는 전체 전력의 약 3분의 1을 공급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은 부지 선정부터 환경영향평가와 설계·인허가, 건설 등을 거쳐 준공까지 10년 이상이 걸린다.

재생에너지는 태양광·풍력 발전량이 기상 여건에 따라 달라져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보완 수단이 필요하다. LNG는 원전보다 건설 기간이 짧고 출력 조절이 가능해 이 같은 변동성과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지만 발전 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한다.

석탄은 국내 발전량의 약 30%를 담당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난 2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원전에 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원전 공론화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기후부

하지만 LNG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다. 정부가 오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을 폐쇄하기로 하면서 석탄이 담당하던 발전량을 다른 전원으로 대체하는 문제가 지 맞물려 있다.

◆ 원전 역할 정하고 재생 확대…석탄 대체안도 검토

정부는 이 같은 전원별 특성을 고려해 12차 전기본에서 향후 역할을 조정한다. 우선 원전은 지난 22일부터 약 3개월간 시민참여단 속의토론과 전문가 공개토론 등을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에 전력수급·계통 검토를 더해 향후 원전의 역할을 12차 전기본에 반영할 예정이다.

단기적인 공급 대응에는 가스발전의 역할이 커질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달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가스발전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생에너지는 대폭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12차 전기본 총괄위원회가 제시한 사업용 설비 잠정 전망은 2030년 100GW, 2035년 163GW, 2040년 220GW다.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하면 2040년 236GW로 현재의 5.6배 수준이다. 확대되는 태양광·풍력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위해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력망 확충도 함께 검토한다.

석탄발전은 폐쇄에 따른 대체 방안까지 논의되고 있다. 지난 18일 공개토론회에서는 2038년까지 폐쇄 예정인 39기 가운데 27기를 LNG로 전환하고 나머지 12기를 양수발전으로 대체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은 21기 가운데 최대 10기는 비상시 가동하는 ‘한보전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는

조기 폐지해 소형모듈원자로(SMR)나 배터리에너지저장장치(BESS)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 전원 구성 넘어 지역 수급·효율도 변수

전국 단위의 전원 구성을 정하더라도 실제 공급 여건은 지역마다 다르다. 김장관은 남서부의 경우 기존 원전 67기와 태양광·풍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송전 의존도가 높은 수도권은 태양광이나 LNG 등 지역내 전원 확보가 필요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수도권에서는 전력 생산량보다 송전망이 제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KEEI)은 수도권 송전선로 부족을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의 주요 제약으로 꼽았다.

공급 확대와 함께 수요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내 데이터센터의 평균 전력효율지수(PUE)는 1.58이다. KEEI는 이를 2030년 1.2, 중장기적으로 1.1 이하로 낮출 경우 AI 가속 시나리오에서 2060년 전력 소비량을 22.2TWh 줄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강천구 인하대 에너지공학하고 교수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은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요한 만큼 원전과 가스, 재생에너지를 적절히 조합하는 에너지믹스가 필요하다”며 “발전설비를 확보해도 전력을 수요처까지 보낼 송전망이 함께 구축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했다.



metro

/유혜은 기자 dhalehdale@

>> 1면 ‘AI 확산·중동 불안…’서 계속

韓 에너지 자립률 22% ‘중동의존’ 공급충격 커

전력을 필요한 곳까지 보내는 계통도 제약 요인이다. 호남에서는 신규 송전선 건설에 주민 반대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은 인접국과 전력망이 연결되지 않은 ‘전력섬’이어서 계통 불안에 외부 지원을 받기도 어렵다.

전원과 전력망 확대를 뒷받침할 시장과 저장장치도 과제다. IEA는 시장 기반 가격체계 도입과 한국전력 기능 분리 등 전력시장 개혁, 에너지저장장치(ESS)의 추가적인 시장 통합이 필요하다고 최근 지적했다.

국내 전력 공급과 별개로 해외 연료 조달의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한국의 에너지 자립도는 2024년 22.1%로 OECD 38개국 중 35위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대형 상선 통항량은 전쟁 전 하루 약 125척에서 지난 21일 선박자동식별장치(AIS) 기준 2척까지 급감했다.

중동의 의존도가 높은 구조는 공급 충격을 키우는 요인이다. 중동산 원유 수입 비중은 지난 2023년 71.9%, 2024년 71.5%, 지난해 69.1%에 달했다. 전쟁 이후 비중 중산 원유 도입을 늘리고 있지만 수입선 다변화에도 비용이 따른다. 지난해 배럴당 수출가는 중동산 1.87달러로 비중 중산 평균 2.99달러, 미국산 3.93달러보다 낮았다. 국내 정유설비의 중동산 원유 적합성도 단기간에 수입선을 바꾸기 어려운 요인이다.

/유혜은 기자